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8.4.(화) 8월 1주차 (제26-44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관세) 美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생산능력 조사」 동향 및 업계 의견 ····· 2
• (반도체) SIA, 「2026 Stat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7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규제) 美 FCC, 외국산(외국 생산) 첨단 로봇·전력 인버터 신규 인증 제한 ····· 10
• (철강) 상무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제안 ····· 11
• (강제노동) 트럼프 행정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관련 43개 중국 기업 추가 ····· 11
• (반도체) 美, AI·첨단컴퓨팅 반도체 R&D에 8억 7,400만 달러 지원 추진 ····· 12
• (관세) 美 25개 주,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 소송 제기 ····· 12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이민, 관세, 에너지 입법 3건 ····· 13
• (행사) CSIS 생명공학 혁신·바이오의약품 관련 행사 ····· 13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4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15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8.5(수)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연설(Fed speech: San Francisco Fed president Mary Daly)
8.6(목)	• 8월 첫째 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Weekly Jobless Claims)
8.7(금)	• 7월 고용 보고서(Employment Report), 실업률(Unemployment Rate)
8.11(화)	• 7월 주택 판매(Existing Home Sales)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관세) 美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생산능력 조사」 동향 및 업계 의견

- 그리어 USTR 대표,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 신속한 완료 계획” 발언
-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등 한국 핵심산업 대미흑자를 공급과잉 근거로 제시
- 공청회를 둘러싼 다양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입장 차이 존재

1. 배경

□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생산능력 조사」 예비 결과 발표 임박

• 그리어 USTR 대표는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7.27.자 언론인터뷰)

□ 향후 우리 기업 미칠 과잉생산 조사 결과의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필요

•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 EU, 멕시코, 대만, 베트남,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 중

- 조사 대상은 철강,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조선 등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과 관련 정부 산업정책 전반을 포괄

• 따라서, 미국 총수입의 99%를 포괄하는 일률 관세 성격의 강제 노동 조치에 비해,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중요할 전망

2. 조사 내용

□ 조사 대상 및 판단 기준

• **(정의)** USTR은 「구조적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을 정부 정책 개입으로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능력이 지속되는 상태로 정의

- 과잉생산의 원인으로 다음 7가지 정책 개입 유형을 제시

① 보조금 등을 통한 생산·수출 촉진, ② 국내 임금 억제, ③ 국유·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행위 ④ 지속적 시장접근 장벽, ⑤ 환경·노동 보호 또는 사회안전망 미흡, ⑥ 보조금성 대출 ⑦ 금융 억압 및 환율 정책 등

• **(판단 기준)** △대미 또는 글로벌 무역흑자의 규모와 지속성 △설비가동률 △부실기업(이자 비용 미상환 기업)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대상 업종)** USTR은 총 21개 산업*을 예시 대상으로 제시

*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재, 유리, 공작기계, 기계, 비철금속, 제지, 플라스틱, 가공식품·음료, 로봇, 인공위성, 반도체, 선박, 태양광모듈, 철강, 운송기기 등

• **(대상 국가)** USTR은 총 16개 국가(경제권)*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

- 이들 국가는 모두 강제노동 301조 조사 대상 60개국에도 포함

* 한국,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 미국 전체 수입액에서 해당 16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에 해당

*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의 상위 10대 수입국 모두가 조사 대상에 포함

□ **USTR의 한국 관련 적시 근거** (연방관보(3.17) 고시 기준)

• 한국의 대규모·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구조적 과잉생산의 주요 근거로 제시

- 글로벌 상품수지는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2024년 520억 달러 흑자 전환

- 대미 상품 무역흑자는 2024년 560억 달러, 2025년 490억 달러 기록

• 한국의 주요 흑자 품목으로 전자,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조선 등을 제시

• USTR은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는 점을 유일한 구체적 정책 근거로 인용

-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구체적 정책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진행 경과**

• (3월 11일) USTR,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대상 과잉생산 301조 조사 개시

• (3월 17일) 연방관보(FRN) 고시, 의견 접수 포털 개설(Docket No. 0067)

• (4월 15일) 서면 의견 접수 및 공청회 참가 신청 마감

• (5월 5일~8일) 4일간 공청회 개최(총 30여 개 패널 구성)

• (7월 27일) 그리어 대표, Fox뉴스 인터뷰서 “조속한 조사 완료” 방침 재확인

• (현재) 8월 초 기준, 조사 결과 미발표 상태

3. 공청회 및 기타 의견

□ 공청회 개요

• 2026.5.5.(월)~5.8.(목) 4일간 美국제무역위원회(USITC) 본청사에서 개최

- 총 30개 패널, 100여 명의 증인(업계 협회·개별기업·외국정부 대표·노동/인권 단체·학계 및 통상법 전문가) 참여, 1인당 5분 발언 및 위원회 질의응답

• 우리 정부 대표는 첫날(5.5) 패널 참석, 해당 조사의 부적절·불필요 피력

- 공청회 중 한국 관련 언급이 100여 회 기록(3일 차 철강·소재 분야에 집중)

□ 공청회 미국 업계 의견 (한국 관련 중심)

가. 철강·금속 분야

• CPTI(Committee on Pipe and Tube Imports)는 한국·중국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232조에 더해 301조 조치를 '적층(stacking)'할 것을 요구

- 한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대상 4억 달러 지원 프로그램 및 540억 달러 규모 철강산업 지원책을 문제 사례로 제시

• Steel Dynamics, AISI(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SMA(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한국을 세계 3위 철강 수출국으로 지목, 국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약 1,800만~2,000만 톤의 생산능력 존재 추정

- 유정용강관(OCTG)의 경우 "한국은 자국 내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생산량의 98%를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지적, 중국과 함께 최우선 조사 대상으로 언급

• 대형직경관(LDWP) 업계는 한국을 對美 LDWP 1위 수출국으로 지목, 이전 동부제철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을 "한국 과잉생산의 사례"로 소개

나. 반도체·전자 분야

• GEA(Global Electronics Association)는 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의 생산능력은 미국과 협력하에 구축됐으며, 경쟁국의 관행과 차별된다고 강조

- 반도체·PCB 산업 특유의 선제적 대규모 투자, 가동률 주기적 변동, 동아시아 특화 생산은 정상적 산업 논리이며, '과잉생산'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

• 배터리 업계는 한국을 일본·호주·캐나다 등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긍정 언급, 비시장적 관행 대응을 위한 우호적 공급망 파트너로 거론

다. 플랫폼·디지털 분야

• Competere LL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독점 집행과 온라인플랫폼법이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지난 10년간 미국기업의 상업적 손실을 약 525억 달러로 추산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되 필요시 최대 30%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

라. 노동 분야

• Labor Advisory Committee 등 노동단체는 한국을 태국, 인도, 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노동권 관련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로 언급

- 노조 결성 억압, 노동법 집행 미흡, 불안정 고용 등의 문제를 제기

마. 화학·소재 분야

• 301조를 활용한 비시장적 관행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세 부과 대상은 중간재보다 완제품(finished goods)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바. 섬유·의류 분야

• 특수 원단과 기능성 소재는 공급처가 제한돼 있어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 미국기업의 조달 비용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 지적

사. 핵심 광물 분야

• 관련 업계는 중국이 수출허가제·5개년계획을 통한 우회적 국가 통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 국가 개입형 과잉생산에 대한 강력한 조사 촉구

□ 주요 기관이 제출한 서면 의견

• ITIF (정보기술혁신재단)

- USTR의 ‘과잉생산’ 정의를 일괄 적용하는데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통상정책 목표가 대중 기술·경제 패권 경쟁의 승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

- 중국의 WTO 가입 공약 미준수(강제 기술이전, 지재권 침해 등)와 ‘이중순환’ 전략, 전기차·디스플레이·태양광 등 업종의 방대한 보조금 사례를 문제로 지적

- “동맹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대중 연합전선 구축을 저해하는 최악의 해법”이라며, 301조 조사의 범위를 중국 단독으로 한정할 것을 권고

• Cato Institute (카토연구소)

- USTR이 제시한 과잉생산 판단의 증거와 방법론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
- 특히 80% 설비가동률을 정상 또는 건전한 수준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 국가·업종 간 가동률 통계의 비교가능성 문제 지적

• U.S. Chamber of Commerce (미국 상공회의소)

- 중국의 과잉생산은 "우연이나 경기순환이 아니라, 시장점유율 확보·외국 경쟁자 축출·생산의 중국 집중을 노린 의도적 국가전략"이라고 평가
- 과잉생산 문제가 철강·금속, 시멘트, 석유화학, 조선, 중형 기계 등 전통 산업을 넘어, 배터리·EV·반도체 등 첨단·자본집약 산업까지 확산하는 것에 우려 표명
-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에 대한 조치는 명확히 반대.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은 수십 년간 교육·혁신에 투자해 신산업의 허브가 됐다 — 이는 301조 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

• 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전미 대외무역 협의회)

- ① 무역수지 지표 활용의 방법론적 부당성, ② 동맹국 대상 관세의 비효율성, ③ 관세 시행 시 적층 최소화·면제·종료 조항 확보라는 실무적 요구 제기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연방관보(3.17), USTR Comment Portal, USTR 홈페이지 등

(반도체) SIA, 「2026 Stat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AI 인프라 확산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성장 및 전략적 중요성 확대
■ 미국은 연구개발·첨단 제조 투자 확대를 통한 반도체 경쟁력 강화 필요
■ 공급망 안정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강조

1. 개요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2026 State of the Semiconductor Industry」 발간 (7.27)

•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투자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가 경제안보와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

- '25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7,9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AI 서버 한 대에는 4,500개 이상의 반도체 패키지가 탑재되며, 반도체는 AI 서버 가치의 95% 이상과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

• **SIA는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 첨단 제조, 공급망 안정성, 인력 양성 및 개방적 무역환경을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

- 미국 내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여 공급망 회복력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강조
- AI 시대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세제지원,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확대 필요 언급

2. 주요 내용

□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확대가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연구개발과 생산기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

• **(1)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고성장**

- AI 데이터센터 구축 확대와 고성능 컴퓨팅(HPC), 5G~6G, 의료기기, 첨단 방산 등 반도체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
- '25년 로직 반도체 매출은 2,995억 달러(전년 대비 +33.8%), 메모리반도체는 2,300억 달러(+39.0%)를 기록하며 시장 성장을 주도

- ’28년까지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4조 달러 이상이 투자되고, 이 가운데 최대 2조 8천억 달러가 반도체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

• ⑵ **미국 반도체 생태계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 미국은 연구개발, 설계(IP), 전자 설계 자동화(EDA), 제조 장비를 기반으로 ’25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약 53%로 세계 시장을 주도
- ’20년 이후 미국에서는 30개 주, 160개 프로젝트, 7,700억 달러 이상의 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되며 제조 및 공급망 기반이 확대
- 미국 반도체 기업은 ’25년 768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며 주요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연구 투자를 기록

• ⑶ **공급망 리스크와 산업 경쟁 심화**

- 지정학적 갈등과 핵심 소재 수출규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확대
- 중국의 갈륨·게르마늄·인듐인화물 및 희토류 수출통제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중동 사태 공급 차질에 따른 나프타와 헬륨 공급 불안 등 핵심 원재료 확보도 새로운 공급망 리스크로 부상

□ **미국의 지속적인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⑴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 AI 반도체·첨단 패키징·차세대 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 미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과학,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함.

• ⑵ **전문 인력 확보 및 산업기반 확충**

- 미국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약 34만 2천 명이며 평균 임금은 유사 산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
- ’30년까지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6만 7천 명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며 STEM 인재 양성과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3) **공급망 회복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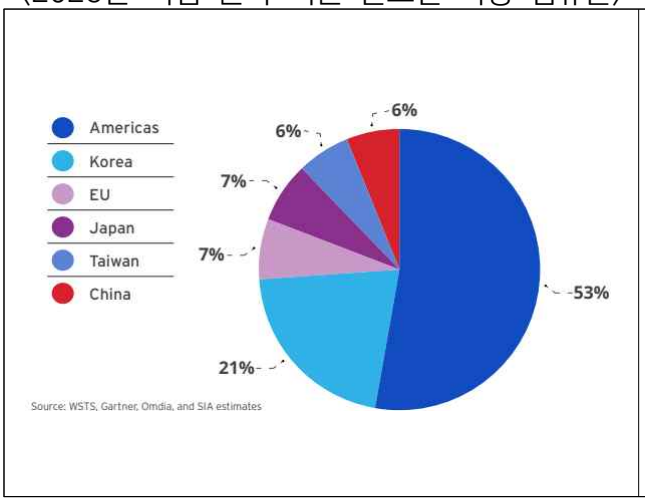
- 핵심 원재료의 공급처를 미국 및 우방국으로 다변화하고 전략비축과 재활용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공급망 안정성 강화 필요
- 핵심 광물과 소재, 제조 장비 등 공급망 상류 부문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필요

3. 시사점

□ AI 시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생산기반 확충과 공급망 회복력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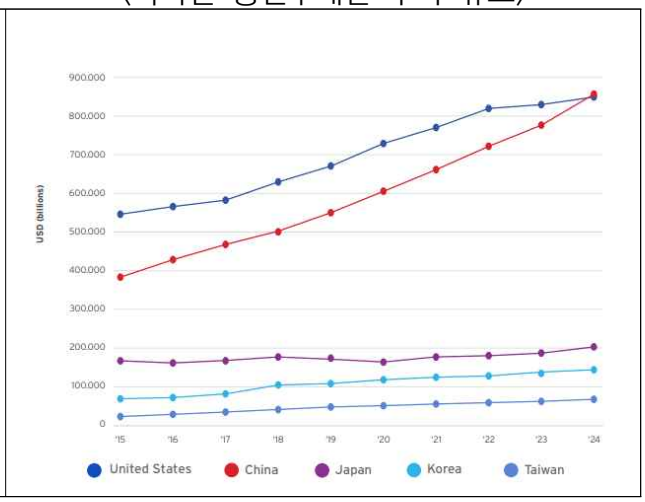
-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컴퓨팅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로직, 메모리, 첨단 패키징 등 AI 핵심 반도체 기술과 생산 역량을 지속 확대 필요
- 연구개발 투자와 첨단 제조시설, 전문인력양성을 연계하여 반도체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 유지 필요성 촉구
- 핵심 소재와 광물 공급망을 미국 및 우호국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신규 공급원 확보, 전략비축, 재활용 기술 개발을 병행하여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제언

〈2025년 기업 본사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자료: SIA 인용]

〈국가별 총연구개발 투자 규모〉



[자료: SIA 인용]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SIA(7.27)

(규제) 美 FCC, 외국산(외국 생산) 첨단 로봇·전력 인버터 신규 인증 제한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 및 공급망 취약성 우려를 이유로 외국산 첨단 로봇 및 연결형 전력 인버터를 규제 대상(Covered List)에 추가**

- 대상에는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 등 이동형 첨단 로봇과 전력망에 연결되는 전력 인버터가 포함, 신규 모델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내 수입·판매 등 제한

- 기존 FCC 인증을 받은 모델의 수입·판매·사용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FCC는 규제 대상 장비의 기존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보유

- FCC는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이 사이버공격, 데이터 탈취·감시, 원격 조작 등 미국 핵심 인프라의 공급망 및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 **현지 언론은 공식적으로는 외국산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나,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조치로 평가**

- 중국은 첨단 로봇 및 전력 인버터 분야의 주요 공급국으로, 중국산 기술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국가안보 리스크 대응 및 핵심 산업의 대외 의존도 축소 차원으로 해석

- 제조업체는 FCC 신청 절차를 통해 첨단 로봇은 국방부(DoD), 전력 인버터는 국토안보부(DHS)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규제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FCC의 장비인증을 통한 시장 진입 규제에 해당하며, 연방정부의 관련 제품 구매·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님.

▪ 자료원 | FCC 보도자료(7.28), 폴리티코(7.28), 로이터(7.29)

(철강) 상무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제안

•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연방관보 8.26. 공지 예고** (문서번호 2026-15961)

-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파생상품 품목을 추가하는 규정 제안

- BIS는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진행 예정 (의견 제출 마감일 8.27.)

* 제출 요구 정보 : ①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함유 비중, ②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준 여부, ③ 국내 생산의 국내 수요 충족 수준, ④ 국내 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⑤ 기타 관련 요인

• **총 14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율 제안(15~25% 수준)**

- 알루미늄 분말, 용접기계 부품,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자주식 크레인, 기타 트레일러, 전기전도 케이블, 농업용 자동적재·하역 트레일러 등 다수 (전체 목록은 자료원 참고)

▪ 자료원 | 연방관보(8.4)

(강제노동) 트럼프 행정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관련 43개 중국 기업 추가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엔티티 리스트에 중국 기업 43개 사 추가 등재**

- 국토안보부(DHS),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엔티티 목록*에 신장 지역과 연계된 중국 기업 43개 사를 추가한다고 발표(7.31)

*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목록에 등재된 총기업 수는 187개로 확대, 국토안보부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전체 대비 약 30% 증가)라고 언급

• **건설, 제약·바이오, 수산물, 식품, 의류, 구리, 면화, 금속·티타늄 가공까지 산업 전반 광범위한 중국 기업들을 신규로 추가***

* 트럼프 행정부는 '25년 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 이후 처음으로 UFLPA 엔티티 목록 추가

- 해당 기업들은 신장산 원자재 조달했거나 신장 정부와 협력해 소수민족(위구르·카자흐족·키르기스족 등)을 신장 밖으로 강제 이송한 정황이 등재 사유

- 8월 3일(연방관보 게재일)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43개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

* '반박 가능한 추정'은 수입업자가 반증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금지되는 방식

- 국토안보부 전략정책기획 차관보 롭 로우는 미국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하고 관련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행정부 의지를 강조

▪ 자료원 | 연방관보(8.3), 인사이드(7.31)

(반도체) 美, AI·첨단컴퓨팅 반도체 R&D에 8억 7,400만 달러 지원 추진

- **상무부는 CHIPS법*에 따라 7개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총 8억 7,400만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

* 미국 반도체 제조·연구개발 역량 확충과 공급망 강화, 국가안보 제고를 위해 2022년 제정된 법률

- 지원 대상은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기업*으로, ▲광반도체 ▲AI 메모리 ▲첨단 패키징 ▲기판·소재 ▲공급망 보안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

* GlobalFoundries, Kepler, Multibeam Corporation, Extropic, Thintronics, OBSIDIA Semiconductors, Aeluma

- 최종 지원은 상무부의 실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소수·비지배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이 적용

- 상무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AI·첨단컴퓨팅·국방·로봇·신약개발 등 전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 내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과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자료원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소(7.29), 로이터(7.30)

(관세) 美 25개 주,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무효화 소송 제기

- **美 25개 주정부, 제301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우회 재도입 주장**

-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단 이후 제122조에 이어 제301조를 활용한 강제노동 관세가 기존 상호관세를 재도입한 조치라며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 제기

- 제122조 관세 종료에 맞춘 신속한 조사와 제301조 활용 사전 공언 등을 근거로, 강제노동 조사가 관세 재도입의 명분(pretext)에 불과하다고 주장

- **관세 부과 권한의 적법성 및 조치의 적정성이 핵심 법적 쟁점으로 부상**

- 관세율(10~12.5%)과 적용 범위가 강제노동 관행 개선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국가별 정책 개선 목표와 관세 해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관세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 제기

- 제122조와 유사한 면제 품목을 유지하고 일부 강제노동 연계 가능 품목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근거로, 강제 노동 대응보다 관세체계 유지가 실질적 목적이라고 주장

- 제301조 상 국가별 협의 및 관세 조치의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행정절차법(APA)상 자의적·불합리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관세 무효화 및 기납부 관세 환급 요청

▪ 자료원 | 인사이드(8.3), 가디언(8.3), AP(8.3)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이민 (7.22)	H.R.9834 (하) (7.22)	Michael Baumgartner (공)	**〈미국 영토 내 갈취 금지법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 외국 정부 관계자가 미국 국민(기업)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행한 경우, 그를 미국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
관세 (7.30)	H.R.9977 (하) (7.30)	Donald Beyer (민)	**〈주택건축 자재 관세 경감법 (Homebuilding Materials Tariff Relief Act)〉** ▪ 2025년 1월 20일 이후 부과된 관세 중 무역구제·세이프가드·협정 분쟁해결 등 비정치적 조치에 따른 관세를 제외하고, 핵심 주택건축 자재를 관세 면제하도록 규정
에너지 (8.03)	S.5220 (상) (8.03)	Catherine Cortez Masto (민)	**〈에너지 프로젝트 재승인 법안〉**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을 개정하여 배터리 가공 및 제조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법안(불법적으로 중단된 연방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를 복원하려는 법안)

* 8월 4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CSIS	8/10 12:30 pm	〈Spotlighting the North Carolina Research Triangle's Biopharmaceutical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Hub〉 ▪ 듀크대학교와 함께, 생명공학 혁신·바이오의약품 제조·인력 개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글로벌 중요성을 논의	링크

* 8월 4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S. Economic Growth Slowed to 1.5% in Second Quarter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1.5%로 둔화)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1.5%로 둔화, 소비 지출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AI 투자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수입 증가를 통해 성장률을 일부 낮추는 상반된 효과를 내고 있다 평가
The Washington Post	U.S. trade deficit isn't much lower than before Trump took office (미국 무역적자, 트럼프 취임 이전과 큰 차이 없어)
	미국 6월 무역적자는 전월 대비 5% 이상 감소한 733억 달러를 기록,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크지 않으며 관세 정책의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
The New York Times	Asylum seekers could be sent directly to deportation under new federal rule (미국, 왜 일본의 약세 엔화 방어를 돕나)
	미국 재무부가 일본 정부와 함께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일본 금융 시장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져
CNN	America's labor market is beginning to find its footing again (미국 노동시장, 회복 조짐 나타나)
	최근 미국 노동시장의 '채용도 해고도 적은(low-hire, low-fire)' 상태가 회복 기미를 보여, 6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기업들의 채용이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4~5월 증가했던 구인 공고가 실제 채용 확대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Reuters	Trump administration drafting ban on Chinese data center devices, sources say (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데이터센터 장비 수입 금지 추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데이터센터 내 광섬유 통신에 사용되는 중국산 광트랜시버(광송수신기)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 검토, 올해 중 발표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 미국 동부 시간 8월 4일(화) 15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US26-15	美 국제무역법원의 무역법 122조 관세 위법 판결 주요 내용 및 전망	2026.5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5.28.		
2026.2.6.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